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선정 의제 질의서

오는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부산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아래와 같이 5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의제별 세부내용 참조: 2~12p)

소속정당 :	선거구명 :	후보성명 :
--------	--------	--------

**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제안한 10대 의제를 귀 후보자(정당)의 공약(정책)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야	의제	수용여부(○표)			부분 또는 수용불가 사유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1	기후환경 에너지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정책				
2	시민안전	안전한 도시 부산 -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4	민생안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5	문화	올바른 문화예술 기반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실현				
6	지역경제 / 노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7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9		부산항만공사 자율성(자치권) 확보				
1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2. 당선 시,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을 받으시겠습니까?**

수용여부(○표)			부분 또는 수용불가 사유
수용	부분수용	수용불가	

## 1.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정책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기후위기 대응 예산 증액
  -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제도화 및 탄소세 도입
  - 산업계 감축량 상향
  - 2030 탈석탄 이행
2. 에너지효율화 의무화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

### ○ 제안 배경

- 기후위기 대응 예산 증액
  - 기후위기대응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의 결과 1,338억 원 삭감  
국가기본계획 목표 17조 2,414억 원에서 3조 4,155억 원 미달
  -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이 계획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로드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감축 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포함.
  - 그러나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량 축소, 불확실한 국제감축·CCUS 확대, 노후원전 수명 연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 에너지효율화 의무화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및 한전 적자
  - 한국의 경우 수입의존도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여전
  -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를 보면 한국은 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고착화

## 2. 안전한 도시 부산 -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금지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2. 영구화될 핵폐기장 저지
  - 한수원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 최신기술 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을 위한 NUREG 1555 적용 (RG1.2 적용 지진위해도 분석)
  - 철저한 주민보호 대책 및 사고별 완화조치 방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실시
  - 심사중인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로 같음하지 못하도록 개선

### ○ 제안 배경

- 한국은 2020년 1월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 국가이다. 부산에는 고리1호기 폐로가 준비중인 가운데 2,3,4호기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한수원은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한 안전성과 수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 부산시와 시민사회는 22년 12월 토론회 개최로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공동으로 검증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는 노후원전과 핵폐기장 의제는 배제하고 있다. 최근 24년 1월 16일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설계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NUREG 1555로 심사지침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노후원전의 지진보강을 위해서도 지진취약도 분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RG1.206이 적용되어야 한다.
- 한수원은 현재 보완중인 사고관리계획서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사고 등을 같음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야 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다수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규칙 제85조 21. 2항의 5>

- 주민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제5조 6의 6.5 주민보호 대책'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및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조, 2조의2, 제103조 위반>. 따라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 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국가기관의 역할 강화
  - 환경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강화
  - 공탁제 도입 : 공탁 관리 위임기관 지정 등 사업자의 비용 공탁 및 공탁을 위임받은 제3의 기관이 공정한 방식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수평적 계약관계로 진행
2.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사업자 책임 및 처벌 강화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필요
3. 환경영향평가 시 다양한 주민참여 강화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합의를 유도해가는 과정이 중요

#### ○ 제안 배경

- 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개발로 인한 큰 갈등이 있음.
  - 부산의 대저대교 및 장낙 · 엄궁대교를 비롯하여 황령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부산진해 제2신항 등 거짓부실 및 부적절한 환경조사가 계속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는 거제 노자산, 제주 제2공항 등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한계로 인한 공정성 문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
    - 사업자는 개발 우선 인식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사업자를 대신하여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자의 경우라도 도급·하도급이라는 계약관계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놓여 있음.
    - 이로 인한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점이 드러남.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에 따른 책임 주체 문제.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는 그 책임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은 대행업자만의 몫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형식적인 검토 및 협의 의견 제시.
- 협의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방문 기회 부족하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협의 의견을 제시.
  - 사업자가 협의 기관의 협의 의견을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협의 기관에 없음.
- 환경평가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철저한 관리
- 환경평가 이력관리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 과정을 기록하여 환경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 방안
  - 환경영향평가과정 중 단계별 결과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첨부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국민참여 한계가 크다.

#### 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주택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의 80%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단,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 ○ 제안 배경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된 많은 청년세입자들이 각각의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그 부담을 해소할지 여전히 고민 중임.
-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대출 금액은 평균 9,600만원 정도이며, 90%를 차입금으로 총당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평균 3.8%에 해당함
- 전세사기피해자 전체의 70%가 후순위 임차인이고, 부동산경매시 전세대출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임
-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평균 9,000만 원 상당액의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함(특별법 적용시)
-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5. 올바른 문화예술 기반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실현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
  -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2. 예술활동 촉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개선
  - 부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부산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 제안 배경

- 문화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인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 법이 가진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위엄과 실효성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에 비례하는 것일 텐데 너무나 미약한 제재 앞에서 예술인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파주시, 여주시, 광주북구, 광주서구 등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미 제정, 시행중인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부산시에는 제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 △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통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 △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일자리 개선
  - △ 예술인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창작공간 제공
  - △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시설 확충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예술인들의 활동이 부산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위

해서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만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는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쓸 정도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심지어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민들간의 상당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연장 수를 예로 들어보면 (민간 공연장 포함)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18	9	8	7	6	6	6	4
북구	기장군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서구
3	3	3	2	2	1	1	0

으로 지역간 문화예술 인프라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법적 지위 보장
  -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법적 지위 보장
2. 부전-마산선 광역철도화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한 광역철도 운영비 정부와 지방 분담
3.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한 추진
4. 지역균형발전 역행! GTX 재검토

### ○ 제안 배경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법적 지위 보장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자원 조직 등 사업 추진 현실적 한계.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법적 지위 확보 필요
  - 부울경 초광역 경제협력 사업 추진 가속도 필요
- 부전-마산선 광역철도화
  - 부전-마산선 2024년 12월 개통 예정. 국토부 90분당 1대 운행 예정. 동해선 같은 출퇴근 가능한 시간 운영 필요. 현재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상 운영비(운영비용 손실금) 지방정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음. 지방대도시권 주민들 수도권 주민들처럼 광역철도 이용 서비스 필요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국민의힘 당론,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본 정체성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함
  - 공공기관 추가 이전 1차 혁신도시 정책과 연계 정책 필요. 집적효과 필수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
- GTX 사업 재검토
  - 윤석열 정부 지난 1월 25일 GTX 사업 발표. GTX A,B,C 기존 노선 연장. D,E,F 신규 노선 신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 예산 134조 원 투입 예정
  - GTX 사업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의문. 134조 원 중 국비 22%인 30조 원 투입, 75.2조 원 민간 자본. 민간 수익성 보장없이 참여 의문
  - 국토의 균형적 발전정책에도 역행.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우려됨

## 7.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적 지원 보장
  -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2.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과의 거래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을 지방은행 지정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 ○ 제안 배경

- 지방은행 위기
  -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일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쇠퇴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현실 직면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대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효과 미미하고 수도권으로의 자금 및 인재 유출 여전히 심각
  - 시중은행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 심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필요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제시, 지방시대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역할 강화

## 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 확보
  - 2025년 국비 6,000억 원 확보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 활성화

### ○ 제안 배경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3년 지속 감소
  - 2022년(6,052억 원), 2023년(3,525억 원), 2024년(3,000억 원). 3년 지속적 감소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효과 확인
  - 부산 지역화폐(동백전) 투입예산 1,055억 원 대비 2,700억 원의 소비를 창출하여 투입 대비 소득 창출 비율이 2.56배임
  - 2021년 부산 동백전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여효과 분석에 따르면 동백전은 지역순환 효과 1조 2,672억 원 동백전 발행을 통해 창출된 부산의 경제적 편익은 약 5,155억 원으로 추산됨
-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보 필요

## 9. 부산항만공사 자율성(자치권) 확보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부산항만공사 특별법 제정
  - 부산항만공사 수익 배당금을 정부 귀속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
2.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임대부 방식 개발
  -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부산항만공사 귀속 후 민간기업 임대 방식 개발 추진

### ○ 제안 배경

- 부산항만공사 매년 순수익 30~40% 배당금 정부 귀속. 지역 항만공사로서 지역사회 발전위해 지역 환원 필요. 지역발전 기여
-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높은 부지 매입비로 인해 민간사업자 참여 어려움 존재. 공공성 확보 차원 임대부 방식 고려

## 1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 탄소 중립 등 환경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방식 추진 확산
  -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 ○ 제안 배경

- 일관성 없는 개발 특혜 전면 재검토, 무분별한 규제완화
- 멀쩡한 아파트 부쉬 자원 낭비, 초과밀 부추겨 도시환경 악화
- 그린 리모델링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노후주택의 단열, 에너지 저장을 함께 고려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추진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